

키우고 채용하고 정착까지… 반도체 인력 생태계 구축 속도

메가특구법 성공의 조건

④ 지역 인재 선순환

서남권 핵심인재 2.3만명 양성 추진
산학연 협력 기업 취업 연계 강화
계약학과 신설·정원 확대 인력 확보
병역특례 인센티브 등 지원책 검토
주거·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확충
전문인력 유입·안착 성패 가를 듯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특별법)이 20~21일에 걸쳐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으로 나뉘어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 키워낸 엔지니어를 지역의 첨단기업에서 고용하는 산·학·연(기업·학교·연구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반도체 전문 인력들이 초광역특구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메가특구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힌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인재 2만3000명 필요

반도체는 첨단을 달리는 산업인 만큼, 석박사급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반도체 팹(생산 시설) 1기 당 근무 인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약 3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문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1400명으로 47%로 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뉴시스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 4기가 조성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약 5600명의 엔지니어급 수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생산 시설과 함께 연구·개발 시설까지 같이 들어오는 만큼, 지역의 고급 인력이 모이는 총본산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는 생산라인과 함께 4000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집적된 핵심 R&D(연구개발) 거점으로 기능하고,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 역시 규슈 지역 대학과 연구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핵심 인

재 2만3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2030년 생산 개시 시점까지 최소 1만명 규모의 현장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부터 오퍼레이팅 등 다양한 수준의 반도체 인력을 연간 6333명 배출하고 있다. 전남·광주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2개소, 일반대학 및 대학원 19개소, 전문대학 9개소, 특성화고 22개소 등 반도체 관련 학과 및 학교의 정원은 1만8823명에 이른다.

전남연구원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과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학사급 이상 엔지니어 배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배출 인력이 한 단계 높은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조성해 신속한 고

급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에너지 등 생산공정 경험을 보유한 인접 산업 재직자에 대한 전환교육을 통해 반도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과 협의를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내 전략산업 영위기업(병역지정업체) 중 사지를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할 때 우대해주는 ‘병역특례 인센티브’ 조항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주여건 조정이 프로젝트 성공 핵심
대규모 전문 인력의 삶의 터전이 될 초광역특구인 만큼 정주여건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주여건 조성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단지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구 전략사업 및 특구 기업·특구 기관에 대해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산업입지,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폭넓게 부여해 정주여건 조성 관련 규제 개선책 방안이 담겼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與 발의 ‘초광역특구법’… 소득 상위 3% 주52시간·휴일수당 예외

관리자·연구개발 전문직 특례 대상
선택근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노동계 강력 반발 속 재계는 환영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규제 적용 ‘예외’ 방안이 담겼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으로 불린다. 근로소득 상위 3% 노동자의 경우, 주52시간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휴일·야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제132조는 관리자와 전문가·연구개발 전문직 등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을 면제하고, 휴일·야근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훈(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해 경영계·노동계에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뉴시스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직과 상품·서비스 연구개발(R&D)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다.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기준을 달리 적

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56조에 규정돼 있다. 회사 측은 노동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법률 준수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확대된다. 이 제도는 일이 많을 때 오래 일하고, 일이 적을 때엔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의 평균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예로 바쁜 주에 55시간, 한가한 주에 25시간 일하는 식이다. 현재 이렇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업무는 최대 1개월, 상품·서비스 R&D 업무는 최대 3개월이다. 법안은 이를 모두 최대 6개월로 늘렸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역시 노동자와 서면 합의 시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인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는 별도로 규정됐다. 법안 제77조는 특구 내 외국기업이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 또 법정공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기업에 이러한 규정의 예외를 허용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노동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대해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 직후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호남 6GW·용인 15GW… 한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속도

호남 6GW 공급계획 연내 확정
용인 15GW 전력망 내년 매듭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첨단반도체 거점인 호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연내 누적 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용인 산단 역시 내년 마지막 협약을 끝으로

전체 전력망 구상을 완성할 방침이다.

21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호남 반도체 산단의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연내 체결하기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2단계 협약에는 약 3G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345kV(킬로볼트) 송전선로 1개와 변전소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1단계로

확보한 3GW에 이번 물량이 더해지면 총 6GW 규모의 전력 공급 계획이 마련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기업들과 전력공급 협약을 맺고 초기 팹 가동 대응을 위한 1단계(3GW) 설비 사전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한전은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1·2단계 송전선로 모두 민가대신 국도와 하천 부지(함평강, 49번 지방도

등)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15GW의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내년 전력망 구상을 일단락 짓는다.

용인 클러스터는 삼성전자가 조성하는 국가산단에 9GW,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에 6GW의 전력이 투입된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이미 지난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6GW 협약을 모두 마쳤다.

삼성전자·국가산단 역시 2024년과 올해에 걸쳐 6GW가 확보된 상태로, 내년 마

지막 3단계(3GW) 협약이 체결되면 용인 전체의 전력 공급 계획은 완성하게 된다. 다만 전력 공급 협약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준공 시점은 기업들의 팹(공장) 건설 일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율될 전망이다.

당초 기후부는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전력망 구축 계획을 세웠으나, 기업들의 투자 및 공장 조성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목표 시점을 2028년 말로 수정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